

## 전시(1937~1945) 일본의 국제관계와 대외무역

서 정 의\*

### 요 약

본 논문에서 전시 일본을 중일전쟁기와 태평양전쟁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국제관계와 대외무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구미제국과의 무역관계가 단절되면서 일본은 전시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석유, 고무, 기계류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얻기 위해 엔블록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영미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대동아 공영권 자체도 붕괴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심 주제어 : 대동아 공영권, 엔블록,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일본전시무역

## I. 서 론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그 이후 15년간에 걸쳐 중국 및 구미제국과 전쟁을 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경우 국제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였다. 구미제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동맹을 맺은 다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채 자신의 전쟁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전쟁은 만주사변을 제1단계, 중일전쟁을 제2단계로 확대하여 갔으며 태평양전쟁으로 제3단계로 들어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었다. 일본은 이들 전쟁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제국이 더 나아가 반파시즘의 기치하에 연합한 세계의 대부분을 적으로 삼고 전쟁을 하였다. 일본은

\* 호서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 29-1, 우편번호 336-795, jiseo@office.hoseo.ac.kr

구미제국주의가 주도하여 만들어 놓은 아시아에서의 질서를 타파하고 일본의 주도하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1938년 11월에 발표한 동아신질서 성명에서는 일본의 주도하에 아시아의 안정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신질서를 건설하는데 전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질서는 일본, 만주 그리고 중국이 서로 협조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서로 돕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시아 인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에 기초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성립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시장을 둘러싼 일본·영국·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족해방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중국 민중과 위로부터 전국통일을 하려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을 상대로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이는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하여 갔다. 전쟁의 발전 과정에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의 관계, 또 소련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波多野澄雄, 1996, pp. 245~274). 그러나 일본이 중일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최대의 난제로 등장한 것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중국시장을 독식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계속 제어하면서 중국에서의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이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점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확인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 일본을 중일전쟁기(1937~1941)와 태평양전쟁기(1942~1945)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의 국제관계와 대외무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구미제국과의 무역관계가 단절되면서 일본은 전시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석유, 고무, 기계류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얻기 위해 엔블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영미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대동아공영권 자체도 붕괴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무역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에 성공한 일본이 자급자족경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국제적 고립상태를 선택하였으나 이는 장기간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군부, 관료, 재벌 등 일본의 지배계층은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부정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경제구조 및 경제력은 이를 견디낼 능력이 없었다.

## II. 중일전쟁과 국제관계

### 1. 중일전쟁과 삼국동맹

1937년 상반기에 중국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일본은 만주지역과 이미 지배하고 있던 화북지방의 일부 지역을 기지로 삼아 군의 배치를 조정하고 화북지방의 주둔군을 증강하였다. 또 북경-요녕 철도 연선에 부대를 주둔시켰으며 많은 군함을 청도, 상해와 양자강의 각 항구에 정박시켰다. 일본군은 빈번히 군사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압력을 가해 왔으며 침략의 예봉을 우선 화북지방의 요충인 북경과 천진으로 향하고 있었다(古屋哲夫, 1985, pp. 80~108). 일본군의 증강에 대한 중국 민중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었고, 일본 정계에서는 7월경에 화북지방에서 만주사변의 계기가 된 柳條湖사건이 재연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1937년 7월에 일본은 드디어 盧溝橋사건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침략전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소규모의 군사충돌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현지교섭을 통해 응급조치식으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노구교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지에서의 교섭이 마무리된 시점에서(日本國際政治學會 編, 1963, pp. 8~9) 近衛文麿 내각이 육군의 강경한 파병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전면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 참모본부의 사실상의 책임자였던 제1부장 石原莞爾는 대 소련군비의 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중국통일이 진행되는 것은 수용하지는 불확대방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참모본부 내에는 石原의 지지자도 적었고<sup>1)</sup> 육군성을 포함하여 중국의 항전력을 경시하는 낙관적 확대파가 우세하였다.<sup>2)</sup> 육군 강경파의 주

1) 소위 불확대파의 주요 인물은 多田駿 참모차장, 石原莞爾 제1부장, 河辺虎四郎 제2과장, 육군성 柴山兼四郎 군무과장, 현지에서는 田代皖一郎 지나주둔군 사령관, 橋本群 참모장, 池田純久 작전주임참모, 松井太九郎 북경 특무기관장, 今井武夫 주재무관 등으로서 군의 작전동원정보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2) 소수파였다고 해서 石原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石原은 '비운의 장군'이라 부르면서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애를 쓴 것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 문제가 있다. 1937년 7월 10일 참모본부는 화북파병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다음 날 각의에서 아무런 반대없이 승인되고 화북파병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중국측을 자극하여 중앙군의 대거 북상, 장개석의 '生死關頭'연설이라는 반응을 불러와 상황은 걸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작전을 주관하는 제1부장 石原이 결재하지 않으면 파병안의 발의는 불가능하였다.

장에 近衛 수상, 廣田弘毅 외상 등은 호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중대결의 성명을 발표한 다음 수상관저에 정계·재계·매스컴 관계자를 불러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당시 외무성 동아국장이었던 石射猪太郎은 증언하고 있다(石射猪太郎, 1950, pp. 271~272). 당시 군·관·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카리스마적 정치지도력을 갖고 있던 近衛의 주도하에 정부와 군부의 합작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배후에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재벌을 비롯한 일본 독점자본이었고<sup>3)</sup> 또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도 이들 지도집단이 일으킨 전쟁을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정부의 협력요청에 대해 각계 대표는 모두 협력을 약속하였다. 과거 滿蒙放棄論을 주장하였던 「東洋經濟新報」도 일본과 중국이 전면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말밖에 못하였다.<sup>4)</sup>

1937년 8월에는 상해에서도 전투가 시작되고, 정부는 9월 2일 北支事變을 支那事變으로 바꿔 불렀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내외국인에게 수긍할만한 전쟁명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육해군 당국은 미국이 중립법을 발동하여 군수물자의 대일수출을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加藤陽子, 1993, pp. 83~122). 전쟁 확대파는 과감하게 일격을 가하면 중국은 항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고, 중국군의 끈질긴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작전계획도 없이 현지군의 움직임에 이끌려 전선을 확대하고 대병력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3개월에 걸친 예상외의 격전 끝에 상해를 힘겹게 점령한 일본군은 후퇴하는 중국군을 쫓아 남경으로 들어가 1937년 12월에 이를 점령한 다음 포로·시민을 대량 살해하고 폭행하였다.<sup>5)</sup>

3)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중국의 민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저지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빗발치듯이 요구한 것이 자본가계급이었고 중일전쟁기에도 일화배척 운동 등으로 일본 제품의 판로가 막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재벌자본들은 정부에 요구하였다. 전쟁과 재벌의 관계에 대해서는 坂本雅子(2003)을 참조하시오.

4) 『동양경제신보』의 소일본주의에 대해서는 井上清·渡部徹 編(1972), 松尾尊允(1998)을 참조하시오.

5) 남경대학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일본군대의 모습, 전쟁의 수행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당시의 일본군은 보급이 충분치 않았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급을 줄여 현지에서의 물자조달에 의존하는 군대였다. 이 조달이 약탈되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폭행·살인이

남경합락 전후에는 전쟁종결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1938년 1월 “이후 중국정부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국 정부는 이후 국민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제국과 진정으로 제휴할 수 있는 신흥중국정부의 성립 발전을 기대한다. 이로써 양국 국교를 조정하여 갱생 신흥 중국의 건설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4~5월의 서주작전을 거쳐 8월부터는 사실상의 수도 武漢三鎮(무창·한구·한양)을 공략하는 무한작전을 시작하고 10월에는 한구를 점령하였다. 광둥도 점령하였으나 국민정부는 중경을 거점으로 더욱 강력하게 항전을 계속하였다. 延安의 중국공산당도 지구전의 제2단계 곧 전략적 대치단계로 전쟁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항일근거지를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1938년 안에 최종승리를 얻는다는 일본 측의 계획은 어긋나고, 백만 가까운 대군이 발이 묶인 채 중국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쟁의 장기화에 당황한 일본 지배층들은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여러 화평공작을 추진하였다. 국민정부를 상대로 한 화평공작 가운데 최대의 것이 트라우트만(O. P. Trautmann) 주 중국 독일대사를 중개로 한 공작이다(稻葉正夫 外編, 1963, pp. 272~275). 이 공작의 표면에 나선 것은 廣田 외상이었으나, 배후에서 추진한 것은 참모본부였다. 조기화평을 희망한 石原 제1부장이 1937년 8월부터 독일과 접촉하였으며 9월 이래는 多田駿 참모차장이 추진역을 맡았다. 그러나 중국은 비교적 온건한 화평안이 제시되었던 11월중에는 브뤼셀에서 열린 9개국조약<sup>6)</sup> 체결국 회의에서의 대 일본경제제재의 실현에 기대를 걸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회회의가 실패한 후 중국이 화평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을 때는 일본 측이 수도 남경점령에 도취되어 화평조건을 화북분리·전비배상을 포함한

---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몸에 배게 되어 그 군대의 기본적 성격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상해에서 남경으로 급진격하는 동안에는 거의 현지물자에 의존하였고 여기서 학살이 시작되었다. 둘째로, 이것은 보급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투항자를 바로 살해한 점이다. 전투에서 죽인 사람보다 패잔병을 죽인 것이 더 많았다. 셋째로, 무기를 버린 다음에도 반항적 태도를 보인자는 죽였다는 점이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일본군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할 적이라는 정신상태가 일본군에게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일본군의 군대교육 나아가 국민일반에게 친황에 대한 絶對隨順, ‘沒我歸一’을 요구한다는 일본파시즘의 지배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 6) 워싱턴회의(1921~1922)에서 체결된 중국문제에 대한 조약. 9개국은 미국, 벨기에,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조약체결국은 중국의 주권, 독립, 영토적 및 행정적 보전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에서의 문화개방 또는 기회균등주의를 더욱 유효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11개 항목으로 크게 강화하였다. 더구나 이들 구체적 조건은 교섭을 전부 위임받은 廣田 외상으로부터 중국측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38년 1월 중국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近衛 수상, 廣田 외상 등은 참모본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국이 성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섭에서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일본과 제시를 요구한 중국 모두 성의가 부족하였던 것이 분명하였다. 이 점을 가지고 '廣田 외상의 모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내각은 그러한 廣田의 행동을 사전에 이미 용인하고 있었다(石井寬治, 1994, p. 41). 트라우트만 공작을 실패로 끝나게 하고 중일전쟁을 진퇴양난의 장기전으로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참모본부가 아니라 近衛 수상 이하 정부에 있었던 것이고, 천황도 이 때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1938년 1월에 '국민정부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이 나온 이후 참모본부는 일시적으로 '戰面不擴大'의 방침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현지군의 압력으로 방침을 바꾸어 4~5월에 서주작전을 시작하였으나 중국군의 주력을 격파할 수는 없었다. 국민정부와의 교섭루트를 스스로 차단한 것을 후회한 近衛는 5~6월에 내각을 개조하고 외상에 육군대장 宇垣一成을 지명하였다.<sup>7)</sup> 1월의 대 중국 성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과 대 중국외교를

7)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경제는 대영미의존성과 이를 포함한 취약성 또 중국측의 선전 등으로 인해 전쟁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중시한 近衛 내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체제정비를 급속히 진전시켜 일본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近衛 내각은 내각참의제 실시·대장성고문제설치·내각대개조에 의한 池田成彬의 입각 등을 추진하였다. 이 近衛 제1차 내각 때의 정책노선은 '池田路線'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환시세의 유지와 공채소화를 향상에 힘을 기울여 전시경제의 가인함을 내외에 알리려고 한 것, 둘째, 대영미협조와 대중국강경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 셋째, 수출진흥으로 전시경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데 주력할 것, 넷째, 강력한 경제통제로 저물가정책을 실현하려고 한 것, 다섯째, 그 강력한 경제통제는 관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경제인이 주도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池田路線'은 중일전쟁 이후의 일본은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3국과 새롭게 전쟁을 시작하거나 중국과의 전쟁확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거나 혹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池田과 '池田路線'을 주도한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일본경제의 강인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일본경제의 취약성을 숙지하고 있었다. '池田路線'은 전시체제강화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경제논리로 전쟁과 군사·외교를 억제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대소련전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던 石原派와 대영·대소전쟁, 대영미전쟁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陸軍強硬派와는 크게 달랐다(松浦正孝, 1995, p. 31, p. 92).

외무성에 일원화한다는 것을 조건으로<sup>8)</sup> 외상에 취임한 宇垣은 곧바로 국민정부와의 비밀교섭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육·해군은 대 중국외교를 담당할 對支院(10월 설치, 12월에 興亞院으로 개칭)의 설치를 주장하여 宇垣은 공작을 방해하였다. 近衛 수상이 약속을 뒤집고 군부의 주장을 지지한 것을 알고 宇垣은 재임 4개월 만에 사임하였기 때문에 절호의 화평기회는 또다시 사라졌다.

蔣介石과 함께 국민당의 유력자인 汪兆銘을 통한 화평공작은 최종적으로는 1940년 3월의 남경괴뢰정권수립으로 겨우 마무리되었다. 이 공작은 1938년 7월에 高宗武가 일본에 와서 육군성 군무과장 影佐禎昭 대좌의 소개로 板垣征四郎육상, 多田 참모차장들과 접촉한 이래 진전된 것이었다.<sup>9)</sup> 본래의 계획은 汪이 중경을 탈출할 때 곧바로 일본정부가 화평조건을 공개하고, 왕은 일본의 비점령지역에 군대를 가지고 신정권을 수립하면서 중경정부를 끌어들여 대일화평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sup>10)</sup> 1938년 11월에 상해에서 影佐 군무과장과 참모본부 중국반장 今井武夫 중좌 등이 왕의 심복 高宗武·梅子平和 회담하여 만든 「日華協議記錄」에는 일본군의 2년 이내의 철군이 정하여져 있었다.<sup>11)</sup> 하지만 같은 달 말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중국 新關係調整方針」에는 철병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정부·기관에 일본인 고문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주권을 크게 제한하는 여러 요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왕의 중경탈출과 맞추어 발표된 近衛 수상의 성명내용도 물론 어전회의의 방침을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화평조건을 항일세력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화평공작의 경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近衛 내각의 대외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교섭원안이 내각에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중국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이 가중되어 교섭을 결렬로 몰아넣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책의 혼선은 정치가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8) 『宇垣一成日記』(昭和十三年), pp. 1240~1241.

9) 「曾走路我記」, 『現代史資料(13) : 日中戰爭(五)』, みすず書房, pp. 356~358.

10) 「渡辺工作ノ現況」(1938年 11月 15日), 『太平洋戰爭への道 : 別卷(資料編)』, 朝日新聞社, pp. 275~279.

11) 「日華協議記錄及同諒解事項並日華秘密協議記錄」, 外務省 編(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 原書房, pp. 402.

않았다는 사실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중일전쟁이 가진 침략적 성격 자체에서 비롯된 바가 많았다. 그 어떤 명목이나 명확한 계획도 없이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일개전 직후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원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립상태에 놓여 있던 중국은 중경으로 쫓겨 들어간 이후 영미 두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933년의 국제연맹탈퇴로 이미 국제적 고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접근하고 있던 상대는 역시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 두 파시즘 국가였다.

1936년 11월에 일독간에 조인되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참가한 日獨伊 방공협정은 독일이 양국에서 대 영국 견제라는 목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소련과 코민테른에 대항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특히 일본측은 일독간의 비밀부속협정에서 한 쪽이 소련과 전쟁을 하는 경우 다른 쪽은 소련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38년 7월에 독일 외상 리벤트로프가 제안한 일독이 삼국간의 군사동맹안은 소련이 아니고 영불을 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영국군사력을 서구·지중해·동아시아로 분산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소련을 상대로 하는 방공협정으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두었고 영불간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였다. 폴란드공격을 서두른 히틀러는 삼국동맹이 체결되기 전에 영소협정이 성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련에 공작을 가하여 1939년 8월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平沼騏一郎 내각(1939. 1~8)은 이것을 독일의 배신행위로 항의한 다음 총사직하였다.

히틀러는 예정 그대로 1939년 9월 폴란드에 침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阿部信行 내각(1939. 8~1940. 1)은 '歐州戰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뒤의 米内光政 내각(1940. 1~7)도 처음에는 대 독일소극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 4~6월에 독일군이 전격적으로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 등을 제압하자 육군의 책동으로 米内 내각은 총사직하였다. 近衛 내각이 총사직하고 平沼 내각이 성립한 것이 1939년 1월 5일이고, 제2차 近衛 내각이 성립한 것은 1940년 7월 21일이다. 이 사이의 19개월을 담당한 것이 平沼, 阿部, 米内 내각으로서 모두 단명이었다. 이에 따라 당면 과제인 노몬한 사건, 일미통상조약폐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독일의 네덜란드, 프랑스 장악, 일독제휴강화 등 외부로부터의 격동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臼井勝美, 2000, p. 110).

제2차 近衛내각(1940. 7~1941. 7)이 등장하고 외상에는 松岡洋右가 기용되었다.<sup>12)</sup> 松岡을 외상으로 임명할 때 木戶幸一 그리고 近衛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으나(岡義武, 1972, p. 119) 近衛는 신질서라는 새로운 전쟁목표를 세움으로써 전쟁의 종결을 막은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일본의 국제적 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松岡을 선택하였다(三輪公忠, 1971, p. 152). 이 松岡이 近衛 수상의 뜻에 따라 육해군의 주장을 수용하여 같은 해 9월에 일독이 삼국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데 松岡의 주관적 의도는 소련도 포함시킨 4국협상의 체결과 그 압력으로 미일 충돌을 피하자는 것이었다(荒井信一, 1978, pp. 150~151). 다른 한편 히틀러도 영국공군의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국본토 상륙작전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벤트روف 외상의 삼국동맹과 日獨伊蘇 4국협정구상을 일시적으로 지지하고 이로써 미국참전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히틀러는 삼국동맹이 대미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지론인 친영반소노선으로 돌아가 대소전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치스 외교의 이중성과 히틀러 자신의 방침변경에 대하여 일본은 거의 알지 못하였다(三宅正樹, 1975, 제4·5장).

제2차 近衛 내각과 군부가 삼국동맹에 걸었던 기대는 그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의 南進政策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1940년 7월에 막 발족한 近衛 내각과大本영과의 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요강」은 본래 육군원안을 해군이 수정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군사적으로 난관에 부딪친 중일전쟁을 대신해서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하루빨리 지나사변의 해결을 촉진함과 동시에 호기를 포착하여 대 남방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 제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남방중시의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남진정책을 선택하였는데 이 신국책의 의의가 있다. 같은 해 8월 1일에는 松岡이 大東亞共榮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12) 松岡은 1933년 2월의 국제연맹 총회에서 일본이 만주사변의 수습을 둘러싸고 국제연맹과 충돌한 다음 연맹탈퇴를 통고할 때의 수석전권위원이었다. 국제연맹 총회에서의 松岡의 극적인 행동은 배외적 애국심에 넘쳐 있던 당시 일본에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일약 시대의 영웅이 되었고 이후 사람들에게 대외강경론자로 각인되어 있었다.

사용하였다(三輪公忠, 1975, p. 162).

남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대미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독일전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유화책을 펴야 하였던 영국<sup>13)</sup>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1939년 7월 미일통상항해조약폐기를 통고하였고, 1940년 1월에 이르러서는 언제라도 대일경제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석유·고철·기계류의 대일수출금지조치를 일찍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1940년 7월에는 우선 항공기용 휘발유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松岡은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의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다음 獨伊와 삼국동맹을 추진하였다.

삼국동맹안을 문제로 한 9월의 어전회의에서 原嘉道 추밀원의장은 미국이 석유·철 등도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일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염려했고 伏見宮博恭 군령부 총장도 석유보완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星野直樹 기획원 총재는 고철수출금지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답하였다. 松岡 외상도 인도네시아 석유가 독일의 도움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1940년 7월의 時局處理要綱에 따라 近衛 내각은 베트남의 원장루트페쇄와 일본군 진주를 요구하였으나 9월 하순 파견부대가 중국과의 국경에서 침입하여 프랑스군과 충돌하고 북부베트남을 점령하였다. 삼국동맹을 조인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곧바로 고철전면금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조치로 일본의 철강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41년 이래 수입고철의 사용은 격감하였으나 선철생산이 증가한 데 힘입어 강제생산량은 약간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또 「日本經濟年報」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남방에서 철광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고 일만 양국에서 貧鑛處理法으로 철강의 증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1936년 정도의 철강생산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전술한 9월의 어전회의에서 기획원 총재의 고철금수에 관한 발언도 생산확충의 실적에 입각하여 약간 민간수요를 억제하면 중일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미전쟁에서 예상되는 군수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망은 아직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의미에서의 타격을 부정할

13) 「天津英佛租界問題の經過」(1939年 6月 21日), 『現代史資料(13) : 日中戰爭(五)』, みすず書房, pp. 185~212.

14) 『日本經濟年報(昭和十七年)』 第3輯, pp. 90~92.

수는 없지만 고철금수의 효과는 미국이 기대하였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 2. 대외무역의 전개

1937년의 일본무역은 전년에 비해 수출은 4억 8,000만 엔 증가하고 수입은 10억 2,000만 엔이나 증가하여 합계 69억 엔이라는 전례없는 거액을 기록하면서 비약적으로 팽창하였다(〈표 1〉 참조). 동시에 수입초과도 6억 엔을 넘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반기의 수입초과액 6억 5,000만 엔과 비교하면 중일전쟁 발발 후인 하반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수출초과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눈에 띄게 격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입억제정책의 효과도 일찍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억제정책이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해는 중일전쟁이 본격적 단계에 들어선 1938년이었는데 이 때는 수출입 모두 격감하여 1936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日本銀行調査局 編, 1970, p. 152). 1939년에 들어서면 수출이 급증하였고 수입도 다시 증가로 돌아서 수출입 합계는 193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또 수출초과도 6억 5,000만 엔이 되었다. 같은 해 가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영향으로 일본의 무역액은 다시 팽창하여 수출입 합계 71억 엔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무역수지에서는 수출초과가 2억 엔 대로 감소하여 악화의 징조가 나타났다. 1941년에는 이미 태평양전쟁의 암운이 깃들기 시작하여 수출입 모두 크게 위축되어 합계 55억 엔 대로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수입초과로 역전되어 2억 5,000만 엔 정도가 되었다. 이리하여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단 감소하였던 무역은 1939년, 1940년에 크게 팽창하였으나 1941년도에 이르러서는 축소되어 전쟁 이전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sup>15)</sup>

일본의 무역을 엔블록과 제3국으로 나누어 보면 명확하게 제3국 무역은 매년 수입초과가 지속되었고 특히 중일전쟁 기간중에 놀랄 정도로 증가하

15)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의 추이는 일본 무역의 실제 모습은 아니었다. 무역액의 증가는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진행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등귀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물가지수로 무역액을 수정해 보면 1937년이 최고이고 그 이후에는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무역액의 추이

(단위 : 백만 엔)

| 연 도  | 수 출   | 수 입   | 합 계   | 무역수지 |
|------|-------|-------|-------|------|
| 1936 | 2,693 | 2,764 | 5,457 | -71  |
| 1937 | 3,175 | 3,783 | 6,958 | -608 |
| 1938 | 2,690 | 2,663 | 5,353 | 27   |
| 1939 | 3,576 | 2,918 | 6,494 | 658  |
| 1940 | 3,656 | 3,453 | 7,109 | 203  |
| 1941 | 2,651 | 2,899 | 5,550 | 248  |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1980), 『昭和國勢總覽(上)』, p. 613.

【표 2】 엔블록·제3국별 일본 무역

(단위 : 백만 엔)

| 연 도  | 대 엔블록 |     |      | 수 입   |       |       |
|------|-------|-----|------|-------|-------|-------|
|      | 수 출   | 수 입 | 무역수지 | 수 출   | 수 입   | 무역수지  |
| 1936 | 658   | 394 | 264  | 2,035 | 2,369 | 334   |
| 1937 | 791   | 438 | 353  | 2,384 | 3,345 | 961   |
| 1938 | 1,166 | 564 | 601  | 1,524 | 2,099 | 575   |
| 1939 | 1,747 | 683 | 1064 | 1,829 | 2,235 | 405   |
| 1940 | 1,867 | 756 | 1111 | 1,789 | 2,697 | 908   |
| 1941 | 1,659 | 855 | 804  | 992   | 2,043 | 1,051 |

자료 : 日本銀行調査局 編(1970), 『滿州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27卷, p. 153.

였다(〈표 2〉 참조). 따라서 일본무역수지가 1938~1940년 사이에 수출초과였다고 하여도 그 내막을 보면 사실상은 국내에서의 移出入에 불과한 엔블록 무역이 증가하여 발생한 수출초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무역은 중일전쟁기를 거치면서 금액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였다. 더구나 외국무역이라고 볼 수 없는 엔블록 무역을 제외하면 제3국 무역에서의 균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개별 상품의 수출입 상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주요 수출품 가운데 면직물, 인견직물은 1937년 이래 계속 감소하였고 생사는 1939년에 일단 격증하였으나 1941년에는 그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목재, 유지 및 동제품, 의류 및 동 부속품은 1939년과 1940년에 연속적으로 대약진하였으나 1941년에는 격감하였다. 하지만 기계 및 동 부분품, 화학제품류, 종이

및 펄프는 일관되게 격증하였다. 철 및 철제품은 1938년과 1939년에 급감하였으나 1940년에는 다시 격증하여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기계류, 금속 및 금속제품, 종이류, 목재, 밀가루, 수산물, 精糖 등은 70% 이상이 엔블록으로 향하였다. 그 외에 견직물도 1938년 이래는 30~38%, 또 통조림 식료품, 도자기 및 유리도 1940년에는 절반 정도가 엔블록으로 수출되었다.

따라서 엔블록으로 수출이 증가한 상품은 결국 견직물, 생사로 대표되는 대 제3국수출에서의 감소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출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력(=외화)을 높이는 대 제3국수출의 감소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6)</sup> 더구나 중일전쟁중에는 군수 관련 물자를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산업원료의 수입은 극도로 억제된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수입품 가운데 중일전쟁 전년인 1936년에 수입액 1억 엔을 넘은 면화(8억 5,000만 엔), 금속 및 동 제품(4억 엔), 양모, 광유 및 동 제품(각각 2억 엔), 기계류(1억 5,000만 엔), 비료(1억 1,000만 엔)의 동향을 보면 면화는 1938~1940년에 4억 3,000만 엔~5억 엔 대였고 1941년에는 3억 9,000만 엔으로 축소하였다. 반대로

16) 일본의 엔블록에 포함된 만주·화북 지방은 미개발지역으로서 여기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곳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만주·화북에 대한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제3국(특히 미국)으로부터 자재수입이 증가하여 정화(금 및 달러)가 유출되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제3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그 결제를 위해 거액의 금은화, 地金이 유출되었다. 정부내에서도 만지개발우선론과 정화의 유지를 위한 대 엔블록 수출 억제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1938년 6월에 면제품의 판매제한, 아연 등의 사용제한, 구리 등의 제조제한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 조치는 국내소비뿐만 아니라 대 엔블록 수출에도 적용되어 대 엔블록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될 원재료의 수입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 엔블록 수출을 제한하자 이전부터 이 지역에 모직물과 견직물을 수출해 온 關西지방의 섬유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현지의 물자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정치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39년 1월에 물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발용 자재를 국내민수용에서 분할해서 공급하거나 선무공작용 물자를 물자조정국과 협의하여 공급하는 등의 잠정적 제한완화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후 엔블록과 일본 국내의 물가 차이가 생겨 가격차에서 생기는 이익을 노리고 엔블록으로 수출이 격증하게 되자 정부는 이제 대 엔블록 수출에 수량제한을 하게 되었다. 1939년 9월 「關東州·滿洲國·中華民國向けの輸出調整に關する件」(關滿支輸出調整令)에 의해 관만지로 나가는 수출품 중 많은 것이 상품별 통제단체 혹은 지역별 통제단체 또는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대 엔블록 주요 수출입품

(단위 : 백만 엔, %)

| 품 목     | 1936    | 1937    | 1938    | 1939     | 1940    |
|---------|---------|---------|---------|----------|---------|
| 수 밀 가 루 | 15(88)  | 29(98)  | 37(99)  | 50(93)   | 39(71)  |
| 출 수 산 물 | 12(54)  | 11(51)  | 16(76)  | 50(82)   | 44(61)  |
| 정 당     | 20(97)  | 18(96)  | 24(100) | 30(100)  | 19(98)  |
| 통조림식품   | 3(4)    | 5(17)   | 19(21)  | 35(27)   | 26(49)  |
| 견 직 물   | 73(15)  | 91(17)  | 79(20)  | 20 (6)   | 17 (6)  |
| 인 견 직 물 | 23(73)  | 18(11)  | 44(38)  | 52(38)   | 29(30)  |
| 종 이 류   | 20(10)  | 27(69)  | 44(85)  | 70(90)   | 64(82)  |
| 도자기유리   | 7(10)   | 9(11)   | 13(20)  | 25(33)   | 41(42)  |
| 금속및금속제품 | 91(44)  | 124(50) | 177(73) | 261(81)  | 262(75) |
| 기 계     | 64(79)  | 85(78)  | 142(91) | 201(99)  | 182(99) |
| 목 재     | 8(8)    | 10(30)  | 33(72)  | 114(93)  | 81(100) |
| 수 공     | 60(100) | 75(100) | 77(100) | 98(100)  | 81(100) |
| 입 소 금   | 8(46)   | 12(44)  | 16(54)  | 16(40)   | 28(44)  |
| 가 죽 류   | 10(42)  | 11(22)  | 4(15)   | 13(43)   | 13(43)  |
| 면 화     | 22 (3)  | 23 (3)  | 71(16)  | 46(10)   | 69(14)  |
| 양 모 류   | 4 (2)   | 1 (-)   | 7(1)    | 14(27)   | 6(4)    |
| 麻 類     | 7(20)   | 6(17)   | 8(34)   | 19(50)   | 12(30)  |
| 석 탄     | 39(77)  | 46(78)  | 55(82)  | 64(83)   | 76(98)  |
| 콩 깻 목   | 27(100) | 33(100) | 55(100) | 100(100) | 58(100) |

자료 : 『朝日經濟年史』(各年版).

금속 및 동 제품은 1938년에 급증하여 일거에 2배 이상인 9억 5,000만 엔이 되었다가 그 이후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41년에는 6억 1,000만 엔으로 급감하였다. 양모는 1938년과 1939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가 1940년과 1941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1936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다. 광유 및 동 제품은 1937년에 일약 3억 엔 대로 증가한 이후 1941년에도 3억 6,000만 엔으로 금속, 면화 다음으로 주요한 지위에 있었다. 기계류는 1938년에는 1940년까지 2~3억 엔 대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1941년에는 1억 3,000만 엔이 되고 비료는 계속 1억 엔 대를 유지하였다. 그 외에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것은 석탄, 콩류, 고무였고 麻類, 밀, 종이 및 펄프, 소금, 목재, 피혁류는 정체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의 동향으로부터 군수자재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楳西光速·加藤俊彦·大島 清·大内 力, 1964, pp. 1058~

1059). 이상의 수입품 가운데 엔블록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을 <표 3>에서 보면 콩(100%), 석탄(77~98%), 소금(40~54%), 가축류(15~43%), 마류(30~50%) 등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전시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석유, 기계류, 금속 및 동 제품은 제3국에 의존해야 하였다. 그 때문에 면화, 양모 등의 수입을 축소해서 이들 중요 제품의 수입을 제3국으로부터 확보해야 하였지만 이것도 1941년이 되면 국제정세의 악화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블록의 확대, 즉 대동아공영권의 이름하에 석유·고무·보오크사이트 등의 자원을 획득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남방으로 엔블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바로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가별 무역상황을 보기로 한다. 우선 1936년부터 1941년까지의 수출을 보자. 매년 연 1억 엔이 넘는 것은 미국, 인도, 중국, 만주국, 관동주, 蘭印(인도네시아)으로 그 합계는 1936년의 경우 총액의 61%, 1941년에는 무려 8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 가운데 중국, 만주국, 관동주 등 엔블록만이 급증하여 이 기간중의 증가액은 10억 엔에 달하였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미국으로서 1939년의 6억 4,000만 엔에서 1941년에는 2억 8,000만 엔으로 격감하였다. 인도, 蘭印 등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였는데 1941년의 경우 전자는 이 기간중 최고 수준인 50%, 후자는 80%나 축소되었다. 그 외에 1939년까지 1억 엔이 넘었던 영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이후인 1940년, 1941년에 잇달아 급감하고 1941년에는 겨우 400만 엔에 불과하였다. 호주, 남아프리카, 캐나다 등 영제국 블록국가들과 필리핀이 꾸준히 정세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41년에는 일제히 격감하였다. 반대로 중남미 제국은 증가추세였다. 독일은 1939년까지 체감하다가 1941년에는 급증하였으나 그것도 잠시였고 1941년에는 반감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출의 태반은 엔블록으로 향하였고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과의 대립과 반목이 깊어져 간 구미제국들은 일본 제품을 배격하였으며 남미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외화획득이라는 절대절명의 요구 앞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조그만 결과였다(日本銀行調査局 編, 1970, p. 157). 독일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이 의존하고 있던 나라였으나 수출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

다음으로 수입을 보면 이 기간중 연 1억 엔을 넘는 나라는 미국, 인도, 만주국, 중국이었다. 엔블록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증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나 미국은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1940년까지 매년 수입비율이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 수입액의 36%인 12억 4,000만 엔이었다. 1941년에는 5억 7,000만 엔으로 반감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수입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미국이고 특히 석유와 고철의 수입의 압도적 부분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척 경계하고 있었다. 일본이 삼국동맹을 추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경제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sup>17)</sup> 1936년과 1937년에 각각 3억 7,000만 엔, 4억 5,000만 엔이었던 인도는 1938년부터 1억 7,000~8,000엔 대로 감소하였고 1941년에는 1억 엔 정도가 되었다. 그 이외의 영제국은 영본국, 캐나다, 호주 등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蘭印이 1938년과 1939년에 1억 엔 대 밑으로 하락하였으나 1940년부터 회복하여 1941년에는 1억 5,000만 엔으로 상승한 것, 1939년까지 수백만 엔에 불과하였던 태국이 1940년에 5,000만 엔, 1941년에는 1억 8,000만 엔으로 비약한 것, 중남미가 수출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한 것 등이다. 이처럼 일본은 수입국에서도 역시 엔블록으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실제로는 더욱 의존이 심해져가고 있다는 것, 영제국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있었으나 인도 등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난인,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권의 축소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일본이 무력을 배경으로 한 압력을 서서히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 Ⅲ. 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

#### 1. 대영미개전과 戰局의 전개

추축 3국의 군사동맹은 미국의 참전의욕을 약하게 하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만들어 1940년 11월에 3선된 루스벨트 미대통령은 연말의 노변담화에서 미국을 민주주의의 대병기창으로 만든다고 선언하고 다음 해인 1941년

17) 『日本經濟年報(昭和十五年)』, 第4輯, pp. 199~205.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제정하여 대 영국원조를 대폭 강화하였다. 무엇보다 이 단계의 미국은 유럽전선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일독 쌍방과의 두 정면전쟁을 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경제제재를 가하면서도 일본을 대미전쟁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1940년 9월 단계에서 석유수출금지안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 일본의 인도네시아 공격을 가져와 미일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었다.<sup>18)</sup>

1941년 4월에는 유럽을 방문한 松岡 외상의 손에 의해 일소중립조약이 체결되었으나 그것은 그가 이전부터 품고 있던 日獨伊蘇 4국협상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독일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알리지 않고 대 소련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松岡의 이러한 구상에는 냉담하였고 또 한편으로 대 독일전에 즈음하여 양면전쟁을 걱정하던 소련지도부가 일소중립조약을 환영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소련정부는 동시에 영미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이것도 일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1941년 6월 독소전의 시작을 계기로 7월에 감행된 남부베트남의 침입도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일석유전면수출금지선 일본이 대 日美蘭전쟁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되었다. 독소개전의 기회를 포착한 松岡은 삼국동맹의 정신에 따라 대 소련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臼井勝美, 2000, p. 138) 육해군이 주장하는 남부베트남 진주안이 近衛 수상의 지지를 받아 결정되었다. 육해군의 주장은 日蘭 교섭조차 좌절된 현재 전략상 최중요지인 남부베트남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미영란의 대 일본포위를 완화시킬지도 모르고, 가령 그 결과 대영미전을

18)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는 석유의 전면적인 대일수출금지에 대해 끝까지 극력 반대하였다. 루스벨트는 1941년 7월 25일 대일자금 동결을 하기 전날 자원봉사자참가위원회에서 미국이 취한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세계전쟁은 진행중이고 거의 2년이 지났다. 맨 처음부터 미국이 노력한 것 중 하나는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남태평양에서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영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본은 그 제국을 확대하기 위한 남진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석유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석유수출을 금지했다면 그들은 이미 1년 전에 蘭印에 병력을 파견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남태평양이 戰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에 석유를 보내는 수단을 취해 왔다. 그것은 영국의 방위에도 연결되고 해상항행의 자유와 안전과도 연결된다. 이제 당사들은 이러한 명확하게 변칙적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문을 읽지도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는 평균적인 시민들에게 계몽해야 한다”(土井泰彦, 2002, pp. 154~155).

한다고 하여도 군사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는 좁은 군사적 시점에 기초한 경직된 발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어전회의에서 杉山 元 참모총장은 현재 독일의 전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松岡 외상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면 영미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남부베트남 침입이 대영미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이러한 낙관적 예측 하에서 동시에 어전회의에서는 대 영미전도 사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sup>19)</sup>

그 때문에 남부베트남 침입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美英蘭 삼국이 잇달아 일본자산을 동결하고 8월에 대일석유수출을 전면중단한다는 강경책을 취하자<sup>20)</sup> 松岡 외상을 배제하고 막 성립한 제3차 近衛 내각과 육해군은 경악하였다. 석유 전면수출금지야 말로 대일경제제재의 마지막 카드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철병을 포함한 일본의 정책이 대전환되지 않는 한 대미영란 전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이후 1941년 12월의 개전까지 일미교섭은 계속되었다. 1941년 10월에 東條英機 내각이 성립한 다음에도 교섭은 계속되었으나 중국에서의 철병에는 절대로 반대한 육군은 장기적으로는 독일군의 승리에 기대를 걸면서 해군과 함께 대미영전으로 일본을 몰고 갔다(波多野澄雄, 1993, pp. 5~32).

1941년 12월 8일 일본해군은 하와이를, 육군은 영령 말레이시아를 각각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본은 대미영전에 돌입하였다. 같은 해 12월 11일에 독일·이탈리아도 대미선전포고를 하여 이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전쟁은 연결되고 문자 그대로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藤原 彰·松本貞雄, 1979,

19) 「昭和十六年九月六日御前會議」(『太平洋戦争への道：別巻(資料編)』, 朝日新聞社), pp. 508~510.

20) 1940년 여름 이래 미국 지도부가 일본의 남진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일정책을 결정한 것은 태평양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었다. 1940년 8월 미해군 첩보부는 일본의 남진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그 후 루스벨트 정부의 대일정책을 결과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일본의 석유정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일본의 남진정책은 그 지도자가 석유의 공급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확신이 섰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본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남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 조건은 ① 미국이 남방에서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도발하지 않고 禁輸와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② 일본의 남방지배가 석유의 충분한 공급을 곧바로 가능케 하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공급단절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석유의 비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인조석유의 개발과 蘭印의 석유자원의 개발로 미국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이 단절되어도 장래에 그만큼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pp. 238~239).

정부는 이 대 미영전을 지나사변도 포함하여 大東亞戰爭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은 대동아 신질서건설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sup>21)</sup> 하지만 용어결정 과정에서 태평양에서의 대미단기결전을 중시하는 해군은 태평양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육군은 태평양에서는 장기지구태세를 갖고 중국·영국의 굴복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육군의 對美持久·英中屈伏이라는 전략은 개전 직전인 1941년 11월에 대본영 정부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일독이 3국협상에 앞서 영국의 굴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속히 극동에서 米英蘭의 근거를 꺾멸시켜 자존자위를 확립함과 아울러 적극적 조치로 장정권의 굴복을 촉진하고 독이와 제휴하여 우선 영국의 굴복을 도모하며 미국의 전쟁 지속을 상실시키도록 힘쓴다. ② 적극적으로 전쟁 상대의 확대를 방지하고 제3국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도록 힘쓴다는 것이었다.<sup>22)</sup> 1942년 1월에 체결된 日獨伊 軍事協定에서 일본은 일본군과 독일·이탈리아군의 작전지역의 경계를 인도양상 동경 70도선으로 정했다.<sup>23)</sup> 이는 독일·이탈리아군이 일본군의 남방작전에 호응하여 중근동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일본해군이 인도양에서 영국·인도간 연락을 끊음으로써 영국의 굴복을 재촉한다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다만 대 소련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던 독일은 중근동 진출의 여유가 없어 협정에서는 일본의

21) 대동아건설의 기초에 대해 東條는 제79의회 재개 벽두(1942. 1. 21)에 그 시정방침연설에서 일본제국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① 미영을 굴복시킬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②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있어 대동아방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제국 스스로 이것을 파악 조치할 것, 이 의미에서 홍콩, 말레이 반도는 동야 禍亂의 기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화근을 제거하는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이 지역을 대동아방위의 거점을 할 것, ③ 필리핀, 버마에 대해서는 이 섬의 민중이 우리의 진의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독립을 줄 것, ④ 네덜란드령 동인도, 호주도 그 주민이 협력적 태도를 갖도록 충분한 이해를 갖고 힘을 기울일 것, ⑤ 重慶政權은 철저히 분쇄할 것, ⑥ 국내 시정방침은 작전제일주의에 따라 총력을 결집할 것 등이다.

22) 「對米英蘭蔣 戰爭 終末促進に關する腹案」, 外務省 編(1965), 『日本外交年表 竝主要文書(下)』, 原書房, pp. 560~561.

23) 1941년의 일독이 협정과 관련하여 각각 행하고 있는 작전을 서로 협조하고 적국의 전력을 신속하게 격파하기 위해 작전지역을 분담하였다. 일본이 맡은 지역은 동경 70도 以東에서 米洲 서해안에 이르는 海面 및 동 海面에 있는 대륙 및 島嶼 등 및 동경 70도 이동의 아시아대륙이었다.

기대는 사실상 무시되었다. 일본육군의 전략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독일군이 조만간에 영국본토상륙을 결행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고 독일측의 대 소련전 중시의 기본전략과 군사력의 한계를 못 본 것이었다.

육군은 의향을 떠보고 있던 독일과의 공동작전이 곤란하다고 판명되어 장기적 전망을 상실하였으나 해군은 예상외의 서전 승리로 사기가 올라 태평양에서의 공세를 적극화하고 미국군의 반공거점인 호주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육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미항공모함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이루어진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으로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잃고 그 결과 일본과 미국의 전력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荒井信一, 1971, pp. 25~26, 41). 기세가 오른 미국은 같은 해 8월 美濠차단작전의 일환으로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여 다음 해인 1943년 2월 일본군은 2만 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철수하였다(服部卓四郎, 1993, pp. 375~384). 과달카날 섬의 일본군 패배가 같은 1월의 스탈린그라드공방전에서의 독일군의 항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24)</sup>

군사동맹으로서의 삼국동맹이 거의 기능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연합국 측에서는 군사동맹조약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영소를 중심으로 군사작전상의 연계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1년 12월의 미국참전 직후에 영국 수상 처칠은 방미하여 미영군사회의를 열고 같은 해 3월에 확정된 미국의 대영협조, 곧 유럽제일주의를 재확인하였다. 이후 소련과 중국도 가담한 수뇌회의가 자주 열려 전략상의 결정·조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서는 소련이 열망한 제2전선의 실현을 둘러싸고 미·영·소 간의 의견대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대립·마찰도 있었으나, 추축국의

24) 과달카날 전투에서의 패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로 해전과 똑같이 島嶼에서의 쟁탈전에서도 항공전력의 우열이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탑재기까지 육상기지로 올려 여기에 전력을 쏟았으나 결국 항공전력을 소모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둘째로 일본의大本영이 미육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일본 육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명백하였다.大本영은 미군의 반격 개시는 빨라도 1943년 중반 이후로 보았다. 미군의 상륙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를 본격적인 공세로 보지 않고 정찰상륙으로만 보았다. 셋째로, 일본군의 전술사상의 경직성, 그 결과로서의 지역고수주의, 퇴각의 부정이 큰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넷째로 육해군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다. 모든 점령지역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육해군을 분할되었으며 그것은 마치 각기 고유의 세력범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육해군은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리지조차 경계하였고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모든 면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작전이 불안하였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실질적인 협동작전이 연합국에는 존재하였다.

1944년에 東條 내각은 총사직하고 小磯國昭 내각이 성립하였다. 小磯 내각은 필리핀 전에서 패배하고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상륙을 막지 못하였다. 나아가 汪 정권의 일원으로 장개석 정권과 접촉하고 있던 繆斌을 통한 대 중경화평공작도 실패로 끝나자(衛藤藩吉, 1968, pp. 289~293) 1945년 4월 5일에 총사직하였다. 후임에는 鈴木貫太郎이 지명되어 7월에 신내각이 발족하였고 외상 겸 대동아상에는 전 외상이었던 東郷茂徳이 임명되었다.

마리아나 기지로부터의 일본본토공습은 1945년 4월 7일부터 재개되었고 5월 2일부터 6월 중순까지 500대 정도의 B29의 대폭격으로 東京·大阪·名古屋·神戸·横浜·川崎 등 6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군수공장도 대형 폭탄에 의한 정밀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도시·공장 폭격과 함께 B29는 3월 27일 關門海峽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로·항만에 잇달아 기뢰를 투하하여 일본의 해상수송에 대타격을 가하였다(アメリカ合衆國戰略爆撃調査團(正木千冬譯), 1950, pp. 84~91).

이 사이 유럽전선에서는 4월 22일에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하고 30일 히틀러는 자살하였다. 5월 1일 베를린이 함락되고 7일에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파시즘·팽창주의적 동맹은 빈사상태의 일본만을 남겨 놓은 채 전멸하였다.

戰局이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부는 여전히 본토결전에 희망을 걸고 40개의 사단, 16개의 독립혼성여단, 6개의 전차사단을 새로이 동원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재향군인 중심이었고 장비도 낡아 제대로 기능할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4월 8일 육군은 본토에서의 작전계획으로 「決戰作戰準備要領」을 결정하였다. 여기서는 “제국 육군은 신속하게 戰備를 강화하고 적 필살의 태세를 확립하여 주적인 미국을 침입을 본토 要域에서 격멸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으며 “국토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히 군민일치 거국개병의 전통의 精髓를 발휘하여 작전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였다.

이미 그 이전에 小磯 내각은 3월 26일의 각의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국가가 요청하는 긴급업무에 전 국민을 挺身 총출동시키기” 위해 국민의용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鈴木 내각은 이 방침을 이어받아 5월 30일 翼

贊壯年卅, 6월 13일 大政翼贊會를 각각 해산하고 國民義勇隊로 개편하였다.<sup>25)</sup> 나아가 국민의용대를 전투조직화하는데 법적 근거를 주기 위해 6월 22일 의용병역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로써 15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17세에서 40세에 달한 여자를 의용병역으로 복무시키는 국민의용 전투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 2. 대동아공영권의 무역

대일자산의 동결로 일본의 세계무역은 엔블록 무역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무역체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일본자본주의의 재생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구나 엔블록 무역이 이전의 대 제3국무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고(通商産業省 編, 1971, p. 298) 특히 엔블록 무역을 통해서는 군수생산력의 증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일본은 판매시장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 점령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 되어 결국 남방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무역은 종래의 엔블록, 프랑스령 인도지나, 태국, 남방점령지로 한정됨으로써 대동아공영권<sup>26)</sup> 무역이 되었다. 이 무역은 '각국, 각 지역, 각 경제권으로부터 각자의 계획적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물자를 공급하고—서로 한 몸이 되어 무역을 규제한다'<sup>27)</sup>는 이념 하에 이루어진 무역이었다. 즉, 물자의 교류는 화폐기구 또는 물가기구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자 그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후 일본무역에서는 '대동아 국토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권내물동계획에 조응한 고도로 계획화된 물자의 합리적 교류'<sup>28)</sup>라는 화려한 목표를 가진 완전한 계획무역을 내외에 표방하게 되었다.

25) 국민의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방공 및 방위, 공습피해의 복구, 도시 및 공장의 疏開, 중요 물자의 수송, 식량증산 등에 관련된 공사 또는 작업 중의 임시응급을 필요로 하는 것, ② 진지구축, 병기, 탄약, 糧秣의 보급수송 등 육해군부대의 작전행동에 대한 보조, ③ 방공, 소방 기타 警防活動에 대한 보조(服部卓四郎, 1993, pp. 893~895).

26) 대동아공영권의 영역은 대본영 정부연락회의의 결정에 따라 '일만지 및 동경 90도에서 동경 180도에 이르는 사이에서 남위 10도 이북의 남방 제 지역'이었고 또 일본군이 '현재 점령 또는 점거하고 있는 범위에서 직접 군의 위력이 미치고 있는 범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7) 「日滿支經濟建設要綱」(日本銀行調査部 編(1973)『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34卷), p. 147.

【표 4】 무역액의 추이

(단위 : 백만 엔)

| 연도   | 무 역 액 |       |       |      | 수 정 액 |      |        |
|------|-------|-------|-------|------|-------|------|--------|
|      | 수출    | 수입    | 합계    |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 日銀물가지수 |
| 1937 | 3,175 | 3,783 | 6,958 | -607 | 2,399 | 2859 | 132.3  |
| 1938 | 2,689 | 2,663 | 5,353 | 26   | 1,931 | 1908 | 139.6  |
| 1939 | 3,576 | 2,917 | 6,494 | 658  | 2,319 | 1892 | 154.2  |
| 1940 | 3,655 | 3,452 | 7,108 | 203  | 2,155 | 1997 | 172.9  |
| 1941 | 2,650 | 2,898 | 5,549 | -247 | 1,445 | 1581 | 183.4  |
| 1942 | 1,792 | 1,751 | 3,544 | 40   | 909   | 888  | 197.2  |
| 1943 | 1,627 | 1,924 | 3,551 | -297 | 778   | 920  | 209.1  |
| 1944 | 1,297 | 1,944 | 3,242 | -647 | 557   | 835  | 233.0  |
| 1945 | 387   | 953   | 1,341 | -566 | 140   | 345  | 276.5* |

주 : 디플레이터는 1933년 기준의 일은도매물가지수. \*는 1~8월 평균임.

자료 : 日本銀行調査部 編(1970), 「滿州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 p. 281.

하지만 대동아공영권을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이라는 것은 “풍부한 대동아자원의 급속한 戰力化”<sup>29)</sup>라는 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본의 전력증강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고도로 계획화된 물자의 합리적 교류라는 것은 결국 대동아공영권 내의 각국에서 일본이 물자를 공출하거나 일본이 각 지역으로 개발물자를 공급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식민지적 착취에 다름이 아니었다. 남방점령지와의 교역은 군이 관리하였으며 수입에 대해서는 군이 현지에서 임시군사비로 매입한 물자를 스스로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군이 직접 수요하는 것 이외에는 이것을 重要物資管理營團에 일괄 불하하여 영단이가 보유·배급하였다. 또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시군사비로 매입하여 군의 손으로 현지로 수송하고 현지기구를 통해 매각한다는 형식을 취하였다.<sup>30)</sup> 따라서 일반무역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엔블록 외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태국에 국한되었다. 중요 물자관리영단은 1943년에 무역통제회와 함께 交易營團으로 합쳐진다(野田卯一, 1943, pp. 669~676).

〈표 4〉에서 개전 이후 1945년의 패전에 이르는 4년간의 무역실적을 중일전쟁기의 5년간의 그것과 함께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8) 『朝日經濟年史』(昭和十七年・十八年版), p. 69.

29) 1943년 5월의 각의에서 결정된 交易計劃方針.

30) 「重要物資管理營團法」(日本銀行調査部 編(1973)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34卷), pp. 698~700.

【표 5】 일본의 지역별 수출입액

(단위 : 백만 엔)

| 국 가   | 1942  |       | 1943  |       | 1944  |       | 1945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관동주   | 422   | 41    | 317   | 39    | 257   | 29    | 48   | 8   |
| 만 주   | 568   | 505   | 480   | 361   | 375   | 447   | 107  | 191 |
| 중 국   | 523   | 676   | 502   | 922   | 489   | 1,249 | 184  | 540 |
| (소 계) | 1,513 | 1,222 | 1,299 | 1,322 | 1,121 | 1,725 | 339  | 739 |
| 佛 印   | 144   | 224   | 97    | 132   | 22    | 22    | 2    | 0.3 |
| 태 국   | -     | 167   | 88    | 49    | 11    | 10    | 3    | 0.1 |
| 필리핀   | 1     | 7     | 30    | 55    | 37    | 17    | 1    | 1   |
| 蘭 印   | 16    | 13    | 56    | 100   | 48    | 68    | 3    | 1   |
| 버 마   | -     | 12    | -     | 5     | -     | 6     | -    | -   |
| 독 일   | 39    | 40    | 15    | 121   | 0.6   | 9     | -    | 3   |
| 기 타   | 13    | 37    | 43    | 141   | 59    | 87    | 4    | 86  |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1980), 『昭和國勢總覽(上)』, pp. 638~645.

〈표 4〉를 보면 우선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서 무역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수출입 모두 20억 엔 대를 넘는 연도가 전혀 없다. 더구나 물가지수가 나타내는 화폐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고려하면 그 축소폭은 더욱 컸는데 수정액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1933년 기준의 물가지수로 수정해서 보면 중일전쟁중에는 수출입 모두 1941년의 14~15억 엔 대를 제외하면 20억 엔 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42년 이후에는 10억 엔 대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1945년에는 수출 1억 4,000만 엔, 수입 4,000만 엔이라는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日本銀行調査部 編, 1970, p. 281).

다음으로 태평양 전쟁기 4개년간의 무역수지를 보면 거의 수입초과의 연속이었다. 이 점도 수출초과가 계속되었던 중일전쟁기와 대조가 된다. 앞서 본 것처럼 중일전쟁기의 수출초과는 엔블록 무역에서의 거액의 수출초과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기에는 제3국 무역은 소멸하고 대동아 무역권내에서의 무역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입초과는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1942년 이래 수출의 급격한 감소 과정과 이와는 반대되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의 수입의 증가 과정은 공영권내에서 개발이 진전되고 생산이 증가되어 일본에 기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일본이 절망적



인 상황에 놓인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황폐화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강행한 사실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지역별 수출입액을 보면 <표 5>와 같다. 무역은 중국·만주·관동주·佛印(베트남)·태국·남방점령지 외에 독일·이탈리아 등의 동맹국과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후자는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상태였다. 더구나 전자에는 일본이 풍부한 물자를 기대하였던 남방점령지·佛印·태국 등과의 무역량은 미미하였고 여전히 중국대륙과의 무역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중핵이 되는 것은 역시 日滿支 블록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原朗, 1976, p. 231). 중일전쟁기까지 개발건설을 위한 수출의 여력이 있었으나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소멸되고 앞서 본 것처럼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약탈적 성격의 수입만 증가하였다.

주요 상품별로 수출입액을 보면 태평양전쟁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표 6> 참조). 1941년의 무역은 이제까지의 무역이 갖고 있던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수출에서는 섬유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농수산물·잡품·금속 및 동 제품·화학제품·종이 및 펄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수입에서는 금속 및 동제품이 선두이고 화학공업품·섬유제품·농수산물의 순이다. 그런데 그 후 수입에서는 농수산물의 상대적 지위가 높아져 수입총액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생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업에서 남자노동력은 감소하고 여성노동력의 증가로 농업생산력이 감소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것이 금속 및 동 제품이었다고, 1945년에 급감한 것을 제외하면 1944년까지 5억 엔 이상으로 거의 30%에 달하고 있다. 철·구리·아연·주석 등 주요 군수물자의 획득은 상황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남방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중국·만주와의 교역조차 어려워진 1945년에는 이와 같은 수입도 거의 정지되었다. 油脂·중유·고무·비료 등 화학공업품도 필수적인 군수물자였는데 그 수입은 1942년 2.6억 엔, 1943년 3.8억 엔으로 수입총액의 15%, 2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1944년부터 급감하여 이 해에는 8%, 1945년에는 7%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남방과의 교통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楫西光速·加藤俊彦·大島 清·大内 力, 1964, p. 1080).

수출을 보면 농수산물이 1944년까지 1억 내지 2억 엔 대로 8~11%를

【표 6】 태평양전쟁기의 상품별 무역액

(단위 : 백만 엔)

|          | 1941      | 1942      | 1943      | 1944      | 1945      |
|----------|-----------|-----------|-----------|-----------|-----------|
| 수 출      |           |           |           |           |           |
| 농 수 산 물  | 271(10.2) | 197(11.0) | 155(9.5)  | 103(7.9)  | 69(17.8)  |
| 화 학 제 품  | 148( 5.6) | 110(6.1)  | 159(9.8)  | 134(10.4) | 48        |
| 사 조 류    | 413(15.6) | 91(5.1)   | 73(4.5)   | 35 (2.7)  | 2         |
| 포 백 제 품  | 518(19.4) | 296(16.5) | 307(18.8) | 145(11.2) | 34        |
| 의류·동부속품  | 111( 4.2) | 82 (4.6)  | 85(5.2)   | -         | -         |
| 종이·펄프    | 147( 5.6) | 142(7.9)  | 149(9.2)  | 141(10.9) | 36(9.3)   |
| 도 자 기    | 48(1.8)   | 33(1.8)   | 18(1.1)   | 21(1.6)   | 3(0.8)    |
| 유리·동제품   | 29(1.1)   | 15(0.8)   | 12(0.7)   |           |           |
| 금속·동제품   | 210 (7.9) | 159(8.9)  | 103(6.3)  | 51(3.9)   | 11(2.8)   |
| 기 계 류    | 429(16.2) | 361(20.1) | 348(21.5) | 281(21.7) | 75(19.3)  |
| 유지·동제품   | 59( 2.2)  | 55( 3.1)  | 31(1.9)   | -         | -         |
| 잡 품      | 268(10.2) | 253(14.1) | 187(11.5) | 386(29.7) | 110(28.3) |
| 수 입      |           |           |           |           |           |
| 농 수 산 물  | 556(19.2) | 525(30.0) | 494(25.6) | 384(19.8) | 333(34.9) |
| 수화학공업품   | 688(23.7) | 256(14.6) | 382(19.8) | 151(7.8)  | 71(7.4)   |
| 사조류·섬유제품 | 585(20.2) | 314(17.9) | 334(17.4) | 296(15.2) | 180(18.7) |
| 종이·펄프류   | 25(0.9)   | 4(0.2)    | 1(0.0)    | -         | -         |
| 금속·동제품   | 759(26.1) | 501(28.9) | 544(28.4) | 539(27.6) | 115(12.0) |
| 입 기 계 류  | 136( 4.7) | 51(2.9)   | 85(4.4)   | -         | -         |
| 잡 품      | 150( 5.2) | 100(5.7)  | 85(4.4)   | 574(29.6) | 256(27.0) |

자료 : 日本銀行調査局 編(1970), 「滿州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 부속통계 3의 21~25.

차지하고 있다. 1945년에는 절대액은 7,000만 엔으로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18%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본 자신은 식량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전쟁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화북·화중으로 식량을 보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 1943년까지는 수출의 중심이 일단은 기계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이 때까지만 해도 수출물자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할 때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개발물자라든가, 일본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중요 물자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집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企劃院, 1943, p. 623). 이는 점령지를 개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으나 이것도 1944년이 되면 이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되고 주로 잡품의 수출에 주력하게 된다. 이 사이에 섬유품의 수출도 계속 감소

하였는데 이는 생사가 수출시장을 상실하고 또 면제품이 원면을 획득하지 못하여 생산을 축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대 영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석유의 경우는 1941년부터 수입이 격감하여 같은 해 석유제품수요량은 1937년의 44%밖에 안 되었다. 태평양전쟁을 시작할 때의 비축량 4,300만 배럴(원유 1,500만 배럴, 제품 2,800만 배럴)은 최고 해인 1939년의 5,100만 배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고 상당한 부분이 전쟁준비를 하는데 소비되었다. 개전 후의 석유 조달은 국내 및 종래의 세력권으로부터의 공급, 인조석유 생산, 남방점령지로부터의 환송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sup>31)</sup> 국내 산유는 1938년을 최고로 그 이후 급감하였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인조석유계획도 결국은 실패하였다.<sup>32)</sup> 인조석유의 생산은 1937~1940년의 합계 39만 배럴에서 1941~1945년에는 518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나 계획량의 7~13%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남방 점령지에서의 설비 복구는 예상 이상으로 진척되어 원유생산이 증가하고 일본으로의 환송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1943년 후반부터 미 잠수함에 의한 유조선 피해가 증가하기까지 남방석유는 기대 이상으로 일본의 석유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일본은 1940년에 미국이 대일 석유수출을 전면 금지할 때부터 항공용 휘발유와 항공용으로 정제할 수 있는 원유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영국과 미국의 권고에 따라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의 반 이하만 공급해 주어 전쟁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土井泰彦, 2002, pp. 139~144).

선박상실량을 연 100만 톤 이하로 한다는 개전시의 예상은 전쟁 2년째에 164만 톤으로 일찍이 넘어섰고 3년째에는 384만 톤에 달하였다. 백 척 가까운 대 수송선단이 수십 척의 미영 호위함에 둘러싸여 대잠항공기에 보호되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점령지·전장을 결하는 해상수송로에서 미국잠수함과 항공기는 일본 선박을 차례로 침몰시켜 1944년에 들어서자 일독 간의 물자수송도 거의 소멸하였다(石井寛治, 1994, p. 58).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944년의 대독일 수출은 60만 엔, 동 수입은 900만 엔, 1945년의 동 수출은 제로이고 동 수입은 300만 엔이었다.

31) 「液體燃料確保對策ニ關ルス件」(參謀本部所藏 [1979], 『敗戰の記録』, 原書房), pp. 207~210.

32) 『朝日經濟年史(昭和十七年·十八年版)』, pp. 151~152.

## IV. 결 론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의 만주지배가 진행되면서 일본과 만주를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만들려는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모순투성이였다. 즉, 일본은 중공업의 기초자재를 미국 및 영 제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지고 만주에 건설과 개발자재를 공급하면서 미국 등 서구제국의 블록에 대항하는 자급적 경제블록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만주, 중국 및 관동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에서의 日貨排斥運動 등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였다. 더구나 만주로부터 콩·콩깻묵·석탄·선철 등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미제국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

엔블록이 형성되면서 대 엔블록 수출초과, 대 제3국 수입초과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국제수지상으로 일본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엔블록으로 수출이 아무리 증가하여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외화는 획득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구미제국에서 계속 수입해야 하였기 때문에 외화의 부족으로 일본경제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과 화평공작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중일간의 반목이 깊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한편 미국은 중국을 독점하려는 일본에 계속 견제를 가하여 왔다.

중국문제로 일본과 미국의 대립은 심화되어 갔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요자원인 석유, 고철 등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하면 이들 자원의 구입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미국을 버리고 독일·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자립경제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석유 등 주요 자원을 찾아 남방으로 나갔으나 이 길은 곧 영미와의 전쟁의 길이었다.

적의 자원을 뺏어 그것으로 전쟁을 한다는 경제운용방식은 전쟁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석유의 경우를 보면 1942년까지만 해도 예상액은 30만 톤이었으나 실제로는 110만 톤 정도가 남방으로부터 들어왔다. 이에 따라 1942년, 1943년까지의 공업생산량은 이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잠수함으로 다음에는 공습으로 선박이 차례로 격침되었다. 조선계획은 침몰선박을 보충할 수 없어 1943년부터 점차 해상수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방으로부터 오는 물자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44년 7월 사이판이 함락하면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1944년 초에 이르러서는 정유공장에 석유가 없고 알루미늄 공장에는 원료인 보오크사이트가 사라지게 되었다. 제철소에는 철광석과 코크스의 공급이 단절되었으며 군수공장의 철강과 알루미늄도 소량에 불과하게 되었다.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것을 비행시킬 연료가 없었다. 이처럼 원재료가 없게 된 일본경제는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대외무역의 단절은 일본에게 있어 戰力의 붕괴 곧 경제력의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 참고문헌 ◆

##### 〈자 료〉

東洋經濟新報社 (1980), 『昭和國勢總覽(上)』.

『宇垣一成日記』(昭和十三年).

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 原書房.

『日本經濟年報』, 『朝日經濟年史』.

稻葉正夫 外編 (1963), 『太平洋戰爭への道 : 別卷 資料編』, 朝日新聞社.

『現代史資料(13) : 日中戰爭(五)』, みすず書房.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11卷, 第27卷, 第32卷, 第34卷.

參謀本部所藏 (1979), 『敗戰の記錄』, 原書房.

##### 〈단행본 및 논문〉

加 藤陽子 (1993), 『摸索する1930年代 : 日米關係と陸軍中堅層』, 山川出版社.

岡義武 (1972), 『近衛文麿』, 岩波書店.

古屋哲夫 (1985), 『日中戰爭』, 岩波書店.

臼 井勝美 (2000), 『新版 日中戰爭』, 中央公論社.

企劃院 (1943), 「交易計劃問答」(日本銀行調査局 編 (1972), 『日本金融史

- 資料』, 昭和編, 第32卷), p. 623.
- 藤原 彰・松本貞雄(1979), 「太平洋戦争論」, 木坂順一郎 編, 『體系日本現代史3』, 日本評論社.
- 服部卓四郎 (1993), 『大東亞戦争全史』, 原書房.
- 三輪公忠 (1971), 『松岡洋右』, 中央公論社.
- 三宅正樹 (1975), 『日獨伊三國同盟の研究』, 南窓社.
- 松尾尊允 (1998), 『民本主義と帝國主義』, みすず書房.
- 松浦正孝 (1995), 『日中戦争期における經濟と政治: 近衛文麿と池田成彬』, 東京大學出版會.
- 石射猪太郎 (1950), 『外交官の一生』, 讀賣新聞社.
- 石井寛治 (1994), 「國際關係」, 大石嘉一郎 編, 『日本帝國主義史3: 第2次大戦期』, 東京大學出版會.
- アメリカ合衆國戰略爆撃調査團(正木千冬譯) (1950), 『日本戦争經濟の崩壊』, 日本評論社
- 野田卯一 (1943), 「大東亞交易に關する諸問題」(日本銀行調査部 編 [1965]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11卷), pp. 669~676.
- 原朗 (1976), 「大東亞共榮圈」の經濟的實態, 『土地制度史學』 71, (柳澤遊・岡部牧夫共編 [2001] 『展望 日本歴史20: 帝國主義と植民地』, 東京堂出版).
-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1963), 『太平洋戦争への道(4): 日中戦争(下)』, 朝日新聞社.
- 日本銀行調査局 編 (1970), 「滿州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 『日本金融史資料(昭和編)』, 第27卷, p. 152.
- 衛藤藩吉 (1968), 『東アジア政治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井上清・渡部徹 編 (1972), 『大正期の急進的自由主義』, 東洋經濟新報社.
- 楫西光速・加藤俊彦・大島清・大内力 (1964), 『日本資本主義の没落 IV』, 東京大學出版會.
- 波多野澄雄 (1993), 「開戦過程における陸軍」, 細谷千博 外編, 『太平洋戦争』,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6), 『太平洋戦争とアジア外交』, 東京大學出版會.
- 坂本雅子 (2003), 『財閥と帝國主義』, ミネルヴァ書房.
- 土井泰彦 (2002), 『對日經濟戦争 1939~1941』, 中央公論事業出版.
- 通商産業省 編 (1971), 『商工政策史 第6卷: 貿易(下)』.

- 荒井信一 (1971), 「戦争の経過とファシズム諸國の占領政策」, 『岩波講座  
世界歴史 現代6』, 岩波書店.
- \_\_\_\_\_ (1978), 「第2次世界大戦と三國同盟」, 木坂順一郎 編, 『體系 日本  
現代史』 第3卷, 日本評論社.